

한국당 전대 정계 개편 단초... 중소정당 연동형비례제 도입 사활

선거제 개혁 시나리오와 정치권 향후 움직임

황교안·홍준표·오세훈 각축... 계파 이해관계 따라 이합집산
선거제 개혁 협상, 진보·보수 모두 촉각... 지지율이 변수

‘다당제 정착’의 기대를 받고 탄생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현재 정치권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다당제와 협치 실현’이라는 이상은 사라지고 자칫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소정당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불안감 속에 두 중소정당은 선거제 개혁을 들고 나섰다. 역시 보수정당으로서 당세 강화를 노려온 정의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목표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상대로 수개월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중소정당이 살아남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거대 양당은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혁이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 개혁이 실패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선거제도도 총선이 치러지면 중소정당의 의원들은 생존을 위해 거대 정당으로 자리를 옮기는 시도를 할 개연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실현되면 정계개편이 되는 것이다.

◇첫 계기는 한국당 전당대회=올 초 여당인 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여론발 정계개편의 동력은 당분간 없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는 보수야당발 정계개편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미 “정계개편의 시발점은 한국당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그 불씨를 당길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지난 31일 현재 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이 중 현재 보수 대선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정치권은 술렁거릴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친 박근혜)가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황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친박계가 다시 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단 당내 비박계(비 박근혜) 의원들, 특히 탈당 후 다시 복당한 의원들의 입지가 약해진다. 더욱이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어 그들의 불안감은 고조될 것

으로 예상된다. 비박계의 탈당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반대로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 내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은 한국당으로의 복당 명분이 약해지면서 당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다. 나아가 한국당 내 비박세력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최근 유 전 대표와 회동하며 당의 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손 전 대표는 비박계인 한국당 김무성 의원과도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과 친박 보수세력을 제외한 한국당 비박계, 평화당, 민주당 내 일부 비문(비문재인)세력 등과 함께 제3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비박계가 당 대표가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단 한국당이 보수세력의 중심을 잡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내 새누리당 탈당파의 이탈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이 분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 경우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잔존 세력은 평화당과 함께 손을 잡고 민주당 쪽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 <선거제 개혁 협상-한국당 전당대회가 보수세력 발 정계개편의 동력이라면 선거제 개혁은 진보·보수를 망라해 모든 정치 세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뒤늦게라도 시행된다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독자 생존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 협상이 무산되고 현 소선거구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상황이 오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총선은 거대 양당간 싸움으로 전개되고, 중소정당의 존재는 미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 내 개혁세력과 평화당은 민주당 쪽으로, 바른미래당 내 새누리당 탈당파는 한국당 쪽으로 기울면서 합계하는 길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들 중소정당 세력을 딱딱 받아들이는 미지수다. 당내 반발은 물론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는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쪽 세력이 통합을 도모하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세력을 불리는 작업을 경쟁적으로 하면서 양당제로 복귀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여권의 지지율은 정계개편의 강력한



정계특위위원장-3당 원내대표 회동

여야간 선거법협상시안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심상정 정계특위 위원장, 민주평화당 장병만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수=정계개편 과정에서 여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면 정계개편 분위기는 잠잠해질 수 있다. 특히 진보 쪽에서 정계개편 동력은 더욱 약해진다. 그만큼 중소정당의 독자 생존 숨통이 터지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음에도 호남에서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지지율이 빠지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당이 계속 캐스팅보트 역할만 잘하면 호남분들이 바른미래당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당원도 입당하고 새로운 세

력도 들어와서 총선 전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여권의 지지율이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불안감 속에서 한국당 전당대회와 선거제 협상 결과를 보며 생존을 위한 정치권 변화를 갈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많은 동력에도 불구하고, 정계개편

은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통설이다. 각 정당의 이해가 맞지 않으면서 정계개편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거대 정당 내 득권 세력의 저항과 인위적 정계개편에 대한 국민적 반감 때문이다. 이 경우 내년 총선 후 자연스런 정계개편도 가능하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전망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의원 정수’에 막힌 선거제 개혁 논의 정계특위 ‘빈손’...3월15일까지 확정안 국회 제출해야

여야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지난해 10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계특위)를 구성해 협상을 계속해 왔으나 지난 1월말까지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투쟁 등을 통해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1월말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정계특위는 총 22차례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따라서 오는 3월15일까지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5일에 확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안이 사실상 정해져야 하는 게 타당

하다. 2월 안에 의결하고 4월까지 최종 확정하는 일정이다.

이 때문에 정계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소(小)소위까지 가동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컸던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국회의원 증원’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수 300명 유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 수를 최소 33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아직도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당이 2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선거제 개혁 안의 2월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100% 연동

의원정수	여야 선거제 개혁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야 3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석수 비율 (현재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2:1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2:1 내지 3:1 범위서 협의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 지역구 248석, 비례대표 82석
비례대표제 방식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 선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선출 범위	지역주의 극복을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	전국 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 항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 및 이중 등록제 도입 검토

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야 3당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거대 양당의 합의가 쉽지 않고 패스트트랙 처리까지도 최장 330일이 걸려서

내년 총선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협상이 올해 말까지 지난해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법을 어기는 상황이지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